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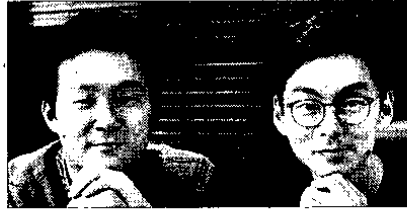
◇오덕근씨



◇김기헌씨



◇박원철씨



◇권민수(오른쪽)·박영민씨



◇한거희씨



◇최금정씨

오덕근 (주)서울F&B 대표 강원경제인 대상

연구개발상 김기헌
 건설혁신상 박원철
 창업성공상 권민수·박영민
 특별상 한거희·최금정

22일 경제인페스티벌서 시상

오덕근 (주)서울F&B 대표가 제 10회 강원경제인상 창조기업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6 강원경제인상 심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창조경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인재 육성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오 대표를 창조기업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07년 법인설립한 서울F&B는 이듬해 황성 공근농공단지로 공장을 신축 이전한 전문 유가공 제조업체다. 2008년 고용인원 24명에서 매년

고용증가를 이뤄 2015년 12월 말 기준 고용인원 236명 증가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2008년 매출 135억원에서 지난해 179억원으로 매년 28% 이상의 매출성장도 기록했다. 2013년 중국 태국으로 640만여원을 수출한 데 이어 2014년 1억1,360만여원, 2015년 26억7,300만여원으로 급증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연구개발상은 김기헌 (주)삼우아이엠씨 대표에게 돌아갔다. 삼우아이엠씨는 토목 분야 전문업체로 1987년 동아건설을 시작으로 2003년 강원대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 29년간 건설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특허 및 신기술을 연구·개발해 국가기반시설에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간접비용 절감에 기여해왔다. 건설혁신상은 창조적인 기업정신과 건전한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편리하고 윤택한 삶의 터전

을 만들어 온 박원철 중미건설 대표가 수상했다. 창업성공상은 2011년 씨감자 및 가공용 감자 생산·유통을 주요사업으로 법인을 설립, 강원지역 농가 소득증대 등에 기여한 권민수·박영민 룡야 대표가 선정됐다. 특별상은 원주 등 3개의 공장에서 110명의 임직원이 연간 350억원의 매출을 실현하고 있는 친환경 중소기업 뉴보텍의 한거희 대표와 세계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전문기업 커피커피 최금정 대표에게 돌아갔다. 오덕근 대표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00만원이 주어지며 김기헌, 박원철, 권민수·박영민 대표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주어진다.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500만원이 전달된다. 시상식은 22일 정선 하이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2016 강원경제인페스티벌에서 열린다. 김보경기자

발주처 甲질 뿌리 뽑겠다더니... '숨방망이' 휘두르는 사정당국

공정위 제재 수위 약해져
횡포 적발하고도 '경고'뿐

권익위 이동신문고 개설
분쟁해결 소식은 '감감'

'갑질 근절' 소극적 공무원
책임 묻고 처벌해야

발주기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처방전의 약발이 다해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까지 나서 발주기관의 횡포에 칼을 겨눴지만 칼끝이 급격히 무뎠다는 분위기가 있다. ▶관련기사 3면

앞서 공정위는 갑질을 일삼은 발주기관을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권익위는 불공정계약 관행 해소를 위한 이동신문고 운영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제재 수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권익위의 갑질 해소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는 일회성에 그치면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의 갑질을 적발하고 160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데 이어 이듬해 한국도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1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경기도공사, 충남개발공사, 울산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 9곳의 횡포에 대해서도 30억원가량의 과징금 철폐를 내렸다.

그러나 올 들어 과징금을 부과한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32억원) 1곳에 불과하고 한전,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



돈이 안 돈다... 예금회전율 11년만에 최저 초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요구불예금의 회전율이 11년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당좌예금, 보통예금, 별단예금, 가계종합예금 등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올해 7월 기준 20.3회로 조사됐다. 이는 2005년 2월(18.1회) 후 11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금회전율은 월간 예금지급액을 예금의 평균잔액으로 나눈 것이다. ▶

사, 서울시도시철도공사 등은 갑질을 적발하고도 경고 조치하는 데 그쳤다.

발주기관의 갑질을 향한 공정위의 처벌이 숨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익위는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체결한 공사계약과 관련해 공사비 미지급, 설계변경 불인정, 입찰 절차 이의 등에 대한 애로를 듣기 위해 이동신문고를 열었다. 불공정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주로 소송을 통해

결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권익위가 분쟁 조정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불공정계약 민원 처리에 대한 권익위의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건설 비리를 단속하는 권익위의 성격상 애초 권익위가 불공정계약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실제로도 권익위의 역할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박경남기자 knp@ ▶3면에 계속

공사비 제대로 안주고, 책임 떠넘기고... '고질병' 여전

발주기관 갑질에 대한 정부의 칼끝이 눈에 띄게 무뎠지면서 공공건설 시장에 만연한 발주기관의 갑질이 좀처럼 사르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감시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망라히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추지 않는가 하면 발주기관의 책임을 건설사에 떠넘기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여전한 실정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단가를 부당하게 산정한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턱기(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설계변경이 이뤄질 경우 설계변경 당시

**설계변경 단가 부당 산정 등
정부 감시망 느슨해진 틈타
우월적 지위 남용 비밀비계
지자체·지방공기업도 심각**

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턱기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표준시장단가를 설계변경 단가로 적용,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를 부당하게 산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공사의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계약규정에 없는 단가 산정기준, 신규

대체비목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삭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 신규 터널 공사를 진행하면서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인근 현장의 성토재로 사용하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인근 현장의 공사가 지연되면서 토사를 보관하기 위한 장소 임대료가 증가하는 등 공사비가 증액됐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총사업비 부담이 커지는 데다 이전에 반영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설계변경을 거부했다.

국방부는 간접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산정비율을 다른 기관의 절반 수준으로 적용했고 법정 기준에 맞지 않은 원가계산, 근거 없는 단가 산출 등으로 공사비를 낮게 책정했다.

한국서부발전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를 변경할 때 물량증가분 단가에 계약예규에서 정한 협의 단가가 아닌 계약 단가를 그대로 적용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의 불공정 계약관행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충주시는 입찰 지연으로 인해 설계시점과 입찰시점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해 단가가 상승했지만 최초 설계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를 발주해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산정

하지 않았다.

SH공사는 실적 단가보다도 낮은 자체 단가를 운영하고 설계변경 때 이 단가를 적용해 공사비를 시장가격보다 적게 산정했다.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건설사에 전가하는 경우도 비밀비계하다.

수자원공사는 인접공사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반·결함을 조사해 감독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올바른 계약 이행을 위해 감독원을 두고 있지만 수자원공사는 인접공사의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을 건설사에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공사는 제때 확보하지 못한 사업용지가 있더라도 건설사는 공기 내 준공에 협조하도록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규정하고 있어 용지 확보에 대한 부담을 건설사에 떠넘기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단가를 불합리하게 산정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발주기관 갑질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며 “입찰 절차나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도 발주기관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나 강요가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